

독감 유행주의보에도 백신 없어 ‘발 동동’

“예약까지 하고 갔는데…” 예방접종 못하고 발길 되돌리기 일췌 광주 바이러스 검출률 가파른 상승 속 품귀 현상에 불안감 커져 市 “3가 백신 2000개 비축”...시민들 “4가 백신 확보 대책 시급”

“예약 후 휴가를 내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독감백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직장인 김민수(32·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독감백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2주일 전 예약까지 했다는 김씨는 “미리 예약만 하면 연말까지 아무 때나 맞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백신이 다 떨어져 접종을 하지 못했다”며 “다른 병원 여러 곳을 찾아 다녔지만 백신이 없어 아직도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백신품귀 현상이 매년 독감 시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데도, 의무 접종 대상자인 영유아와 노인 등에 대한 백신 수급만 관리할 뿐이라며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

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5.9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후 올 46주차(11월 10~16일)때 8.2명, 47주차(11월 17~23일) 9.7명으로 독감 환자가 매주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지역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도 상승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호흡기 환자검체 중 첫째 주와 둘째 주 4% 이하였던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셋째 주 23%(35건 중 8건), 넷째 주 25%(44건 중 11건)로 나타나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독감이 유행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병·의원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용인 ‘3가 백신’과 ‘4가 백신’ 모두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시민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가 백신은 이미 품절 상태이며, 3가 백신은 광주시가 일부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현재 3가 백신 2000개를 비축

하고 있으나,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인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비축해놓은 것이어서 일반 시민들은 맞을 수 없다.

독감 백신은 3가와 4가 2종류로 나뉘는데, 3가는 A형 독감 바이러스 2가지와 B형 바이러스 1가지에 대한 항원이 포함되어 있고, 4가는 여기에 B형 바이러스 항원이 추가돼 있다.

백신품귀 현상은 일선 병·의원이 백신을 과하게 구입했다가, 수요가 없어 백신이 남게될 경우 폐기에 어려움을 겪어 소량만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접종 여부는 알지 못한다. 특히 4가 백신은 제조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다 보니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아직까지도 영·유아나 노약자용 백신은 충분하다. 보건소 등에서 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은 독감에 걸려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면서 “광주시는 내년부터라도 시민의 독감백신 수요 등을 파악해 의료계와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4가 백신 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 3개월간 2만7천명 검거

경찰청, 1286명 구속

경찰청은 “올 9~11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피해자 2만71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8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거된 범인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1만2583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기 7532명(27.8%), 보

험사기 4893명(18.0%), 유사수신·다단계 758명(2.8%), 불법대부업 571명(2.1%)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를 강력 단속하고,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용 겨울 점퍼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아이들이 입는 겨울용 점퍼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체내로 흡수돼 폐·신장·피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는데,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피디션 ‘키즈숏마운틴북다운’ (385.6mg/kg)이었다. 이어 블루독 ‘마이웜업다운’ (269.3mg/kg), 베네통키즈 ‘밀라노롱다운점퍼’ (191.4mg/kg), 네파키즈 ‘크로노스다운자켓’ (186.1mg/kg), 탑텐키즈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 (183.3mg/kg), 페리미즈 ‘그레이디다운점퍼’ (91.6mg/kg) 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년 전 내연녀 숨지게 한 뒤 자살 위장 40대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수사에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당시 38세)씨를 목 졸라 살인사건 뒤 작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A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경찰청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사건이 발생한 모텔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작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도 밝혀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A씨는 일산화탄소를 마셔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왔다”며 “법의학자문과 휴대용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자살로 위장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경로당에 성탄 트리 생겼어요

5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장원부녀경로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행사에 참가한 부녀회원들과 법원어린이집 원생들이 형형색색의 소품을 이용해 트리를 완성한 뒤 성탄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노조 동의 받아 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근로자 개별 동의없이 불리한 적용 불가”

근로자에 유리한 기존계약 우선 대법원 판결...1·2심 뒤집어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유리한 내용이 담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사업장 내부 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하게 되는데, 취업규칙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됐을 경우 이를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씨가 레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부터 A사에 재직해온 김씨는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 동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사는 2014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연봉 7000여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나, 임금피크제에 따라 2014 10월-

2015년 6월(정년 2년 미만)에 기존 연봉의 60%, 2015년 7월-2016년 6월(정년 1년 미만)에 기존 연봉의 4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병무청 시행 8년만에 폐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동반입대병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폐지됐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별도의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선발을 중단한다. 병무청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를 규정에 반영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2011년 1월 시행됐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해 함께 훈련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아 도입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스스로 용서 안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자훈)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중간간 및 준강제추행)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

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으며,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미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연합뉴스